

‘신종 코로나’ 여파...전남 봄꽃축제 줄줄이 취소되나

3월 예정 9개 축제 중 광양매화축제·해남뽕끝매화축제 ‘취소’ 확정

구례산수유꽃축제도 ‘고민’...“지역경제 타격 예상되지만 안전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남도 내 봄꽃 축제들이 대거 취소될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 효자 축제인 꽃 축제의 취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자치단체가 울상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한 해 115개의 축제가 예정돼 있는 전남에서 당장 3월에 열릴 예정인 9개 축제 가운데 광양매화축제와 해남뽕끝매화축제의 취소가 확정됐다. 또 구례산수유꽃축제도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7일 긴급회의를 열고 3월6일부터 15일까지 열기로 한 광양매화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남에서도 발생하는 등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불

안감도 커진데 따른 결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매년 150만명 인파의 관광객들이 찾고, 그에 따른 경제 효과도 400억원에 이르지만 국가적 재난상황에 동참하기 위해 취소했다”며 “지역경제에 타격도 예상되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며 축제위원회에서 동의해 왔다”고 밝혔다. 해남군도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오는 3월7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해남뽕끝매화축제를 취소했다. 더욱이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2년간 개최하지 못하다, 지난해 다시 축제를 시작한 매화축제가 올해 또 다시 취소되면서 지역경제에 그늘이 계속 드리워지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축제를 준비하려면 예산도 세우고 홍보도 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분위기가상 진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취소를 결정했다”며 “코로나 여파가 빨리 가라앉지 않으면 이후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3월14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된 구례산수유꽃축제 개최를 놓고 구례군은 고민에 빠졌다. 매년 30만명이 찾아오고, 지난해 해에만 직접 경제유발효과가 155억원에 이르는 효자축제를 취소해야 할지 결정이 임박한 상태다. 구례군 관계자는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할 회의를 다음주에 열 예정”이라며 “그 전에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광주·전남 신종 코로나 확진 3명 상태 ‘양호’

폐 관련 기저질환 있던 16번 환자, 최근 경증상태로 완화

과거 폐렴 질환을 앓았던 16번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들의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전남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16번 환자(42·여), 18번 환자(21세·16번환자의 딸)와 조선포병원에 있는 22번 환자(46세·16번환자의 오빠)의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 관련 기저질환이 있던 16번 환자는 최근까지 오한과 발열 등의 증상이 이어졌지만 전날부터 폐렴 증세가 거의 소실돼 경증상태로 완화됐다.

18번 환자 역시 증상이 일부 발현되고 있지만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22번 환자도 기침, 오한, 발열 등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 16번·18번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후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이들은 총 446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75명이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다.

전남지역 22번 환자 접촉자는 아내 1명(음성)이고 전남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9명이 준접촉자로 분류돼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는 총 27명이며, 이 가운데 24명이 격리중이고 3명은 퇴원한 상태다.

의사환자는 2749명으로 194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809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신봉우 기자



주인안전방역단 “코로나 확산막아요” 운남동주인안전방역단이 10일 오후 16·18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머물렀던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21세기병원 앞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16·18번’ 광주 母女 확진자 접촉자 446명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16번 확진자 A씨(42·여)와 18번 확진자인 A씨의 딸 B씨(21)의 접촉자 수가 10일 현재 4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175명이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접촉자 수는 지난 5일 306명, 6일 340명, 7일 378명, 9일 417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시는 16번·18번 환자와 접촉했

다는 신고자가 이어지면서 접촉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들의 병원 CCTV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GPS 기록 조회 등을 통해서도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총 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각각 전남대병원과 조선포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교육계 ‘김영란법’ 위반 9건...15명 과태료 부과 등 처분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 지역 교육계에서 총 9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부정부패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9건의 위반의심 신고가 있었다.

시민모임은 이중 수수자와 제공자 15명과 1개 기관이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거나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광주 한 고등학교 A교사는 학부모 10명으로부터 50만원을 설인 사비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 끝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교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100만원의 과태료부과와 함께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학부모 6명도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았다.

고교 교사 B씨의 경우 수학여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업소에 숙박한 뒤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로 조사가 진행돼 B씨에게 과

태료 50만원, 감봉3개월의 조치가 내려졌다.

시민모임은 “청탁금지법 시행 3년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승진·전보 등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전담팀 설립, 전 교직원·행정직 교육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062)943-0135 ~ 6
FAX: 062)943-0134